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2021년이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일상 회복 소위 말하는 워드 코로나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다. 일상 회복을 선언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네덜란드는 다시 봉쇄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팬데믹의 확산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를 빠르게 경험했다. 언택트와 콘택트의 조화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솔루션 확장과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소비자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문고리 택배 마케팅과 대중교통 회피 영향으로 운전면허 학원이 호황이었다고 한다. 코로나 블루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명품 구매라는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현재까지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현재 대선후보들이 기회균등화와 과정의 균등함 등을 내세워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반드시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하여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필환경(必環境) 의식이 다시 높아졌다. 프리 사이클링과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크루얼티 프리 제품, 비거니즘 운동과 컨시어스 패션 바람이 불고 있다.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슬기로운 주거 생활을 위해 흡연테러업계가 호황을 이뤘다고 한다. 스마트한 업무 생활을 위해 필자도 많이 참여한 줌과 구글-미트로 화상회의와 원격수업이 진행되었고, 네이버엑스나 카카오투크를 통해 업무 협업이 이뤄졌다. 모바일 게임과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린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나 왓차 같은 OTT 서비스도 확대되어 즐거운 여가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많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내용에서 대선으로 초점이 옮겨진 것이다.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에 대한 소식이 연일 정치면 토픽으로 전파되고, 최근 불거진 전두환 발언과 대장동 의혹 등 기대보다는 실망하게 되는 내용도 많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니 연일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논쟁도 하고 격정도 하는 것을 보면 대선이 현재 최대의 관심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많은 변화와 함께 관심이 옮겨가면서 우리 사회가 그간 추진했던 많은 일들이 관심이 멀어지면서 서서히 잊혀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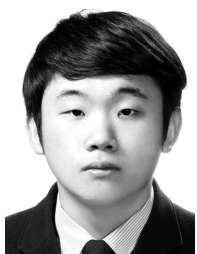
예를 들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다. 해결 의지를 보이기는 하지만 더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일본으로 인

해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일본의 핵심 부품 수출 제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대응하고 있을 때 일본 유니클로의 한 임원은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보란 듯이 불매운동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수입 부품 국산화로 국일본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일도 있었다. 이 또한 잊히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한다. 광주 동구의 학동 재개발 참사 또한 많은 대책이 나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긴 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듯하다.

한편 수도권 등의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개발 압력으로 인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도 공모를 통해 1차에서 13곳, 2차에서 39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2차에서 광주는 동구 우리동네 살리기 한 곳, 전남은 보성·강진·영광의 일반근린형 세 곳, 담양의 주거지 지원형 한 곳 등 광주 전남에서 총 네 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

도시재생은 정권이 바뀔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꾸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도시 삶의 형태를 바꿔 가야 한다. 개발 논리에 밀려 뒤로 처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잊혀 가는 것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꿈꾸는 2040



오태하
위민연구원 운영위원·대학생

광주에는 오월이 되면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린다는 말이 있다. 자식을 잃은 서러움, 가족을 잃은 아픔이 겹쳐 하늘을 울렸던 것일까.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깊은 한숨이 나오는 계절이 바로 광주의 오월이다.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에 벌어진 비극은 그렇게 필자에게도 친형처럼 '살아남은 자의 아픔'을 짊어지었다. 광주의 아픔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피와 역사와 공기로 계승되었다.

최근 들어 부쩍 광주 사람이 서러워질 때가 많다. 오월이 되면 유난히 쓰라렸던 가슴이, 찬바람이 불고 입동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리다. 역사의 광주와 현재의 광주가 공유하고 있는 슬픔이 상당한 이들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은 참담할 뿐이다. 하물며 비극의 주범을 억지로 떠먹여 애써 가리웠던 분노를 자아내고 자신의 반러견을 활용해 조롱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자아낸다. 그러나 필자를 진정으로 서럽게 하는 것은 광주의 오월이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광주의 오월은 이미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이들이 광주가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광주가 아직도 오월을 떠먹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언제든 오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느냐고 묻는다. 광주가 언제쯤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을 살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광주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사과받지 못했다. 참담한 학살의 주범에게도, 심지어 책임 있는 어느 장본인에게도 사과는 없었다. 용서는 사과와 치열한 뇌우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광주가 오월을 먼저 꺼내든 적도 없다. 오월을 혐오하는 이들을 품어 안고 싶었던 이들이 계절마다 광주의 오월을 조롱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가 언제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광주의 오월은 과거가 아닌, 끝나지 않은 현재 이기에 광주는 현재에도 여전히 오월을 살아가고 있다.

최근 유독 격해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와 멸시는 우리 사회의 혐오 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는지, 갈등 조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심지어 정치를 삶의 모든 상식을 결정하는 척도로 삼고 사고의 편협성에 갇혀 버린 이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80년 광주가 입은 상처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광주 사람으로서, 광주 정신의 수많은 계승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픔으로 다가온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비극적 영광'을 두고 영광만을 감양하고, 비극을 애써 가리는 모습은 온당치 못하다. 심지어 그것을 정치의 구호로 삼아 혐오자들의 결집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슬픔과 영광의 양면성을 재조명하고, 광주 정신이 우리 사회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민주 정신임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과학과 역사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과학과 역사는 어느 시대에도 정치의 중요한 논쟁거리였지만, 정치라는 주관적 영역이 과학과 역사라는 객관적·합의적 영역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명확한 역사 앞에서 겸허한 정치가 이뤄지기를 소망해 본다.

광주의 오월은 이미 끝났다는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죽음과도 같은 상처를 입은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기도 전에 왜 상처가 낫지 않았느냐 물어치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하물며 그 상처가 가족을 잃은 이의 단장과도 같은 아픔이며, 자신의 삶을 잃어 버린 이들의 신용임에야 말할 것도 없다. 부디 광주의 비극적 영광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거둬 주시라. 현재에도 숨 쉬고 있는 역사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광주의 오월을 죽여 버린 역사로 밀어 넣지 마시라. 역사의 판결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하시라.

기고



김일태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작년 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지구촌을 휩쓸면서 우리는 2년여 동안 코로나의 기나긴 암흑 터널을 통과해 왔다.

얼마 전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단계적·점진적 회복, 포용적 회복,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번째 방향인 포용적 회복이다. 포용적 회복은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는 물론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명시한 것으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현 '워드 코로나'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지역도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청년층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열리지 않고, 노년층과 경력 단절 여성층은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며, 일반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의 자유마저 크게 축소됐다. 이로 인한 피로감이 적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자치단체

코로나 위기, 지방 재정의 역할 절실하다

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해 왔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정책과 방역의 방향이 재난관리 측면에서 이뤄졌는데 일상 회복에 접어드는 지금은 재난을 겪은 모든 시민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정책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역 지표에도 '사회 회복성 지표'를 개발해 회복의 방향과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회경제적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꾀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의 강도와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최근 광주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광주 일상회복 지원금'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정책도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상 회복 지원금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불편을 인내하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정착시킨 시민 모두의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가 있다. 광주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방역 모범 사례를 무수하게 만들어 왔다. 대구 확진자가 급증할 때 광주의 병상을 대구 환자들에게 제공한 '병상 연대'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적극적 코호트 격리, 전국 최초 관내 요양시설 전수 검사, 전국 유일의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정 선별진료소 등으로 방역 선도 도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둘째, 일상 회복 지원금을 광주에서만 유통되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148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안에서 유통되고 순환돼 서민 경제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 경기 회복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도 147만 시민에게 10만 원씩 보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셋째, 경기 상황에 따른 재정의 경기 조정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가 나빠지고 시민들 형편이 어려울 때 돈을 풀고, 향후 경기가 좋을 때 돈을 거둬서 들어서 경기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지방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때다.

일부에서는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광주시의 재정 여력을 염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시의 재무 비율은 17%대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재무 비율 24%까지는 상당한 여력이 있으며, 향후 지역의 경기 회복으로 추가적인 세수 수입도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광주시는 총 14차례에 걸쳐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지금은 일상 회복이라는 대전환의 시점을 맞아 선별 지급 방식보다는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가 코로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 일상 회복 지원금 지급과 같은 효율적 재정 운영 전략을 통해 방역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위기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공공성 살리면서 개발이익도 공유해야

광주의 근대산업 유산인 북구 임동 일신 방직과 전방(옛 전남방직) 공장 부지가 신구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개발된다. 그동안 보존 여론이 높았던 화력발전소, 보일러실, 고가(高架)수조 등 8-15 광복 이전 시설물들은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지정해 원위치에 원형 보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광주시는 옛그چه 시청에서 '전방·일신 방직 부지 개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발 계획과 공장 건축물 보존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시설물 이외에 광복 이후 설치된 생산·저장·생활·관리 등 27개 시설도 역사·장소·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활용 가치가 높은 시설은 적극 보존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해당 부지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계고를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상업·업

무·사회·문화 시설의 융복합 개발을 원칙으로, 도로·공원·녹지·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마련한 계획은 건축·문화재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기획단이 지난해 8월부터 23차례나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발 업체와 상당수 주민들은 형체조차 알지 못하는 '개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본 개발 계획과 공장 건축물 보존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시설물 이외에 광복 이후 설치된 생산·저장·생활·관리 등 27개 시설도 역사·장소·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활용 가치가 높은 시설은 적극 보존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해당 부지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계고를 위한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파트 및 주거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상업·업

전남 선출직 전원 '부동산 거래' 조사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지역 선출직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전남 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수조사 대상은 전남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 20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6명 등 268명의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자.

전남 도당은 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현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하위 20%로 분류해 공천 과정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

라는 것이다. 또한 12월까지 진행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작업을 통해 부동산 투기 등 7대 비리에 관한 자술서와 소명자료 제출받아 재직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선출직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 추천 과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땅은커녕 내 집 한 칸 없는 서민들로서 고위 공직자들이나 선출직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을 바라보면서 그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해 왔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까지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불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민주당 전남 도당의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 의뢰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無等鼓

정치권의 '호남 민심 쟁기'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지난 달 22일 광주를 방문해 5·18묘역을 찾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8일 광주를 찾아 호남 지역민들을 만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10일과 11일 광주·전남을 방문,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모양새를 닮았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처럼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앞다퉀 광주·전남을 찾은 것은 '호남'으로 상징되는 민주·진보 진영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호남 지역민들은 그동안 '묻지 마 투표'라고 불릴 정도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 온 민주당 후보에게도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다. 대선 초반이긴 하지만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율이 9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은 '고민하는' 지역민의 심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일보에는 '역대 대선의 호남 득표'를 분석한 지난 10일 자 보도에서 '내년 20

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80%후반-90%대 득표를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볼모지'인 호남에서 지지율 10%를 넘길 수 있다면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으려면, 호남에서 지지율 90% 이상의 몰표가 나와야 한다는 분석이 쏠린다.

물론 민주당 내에선 '(호남 사람들은) 막상 투표소에 가면 민주당 후보를 찍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호남을 다루기 쉬운 '호남'이 속 호수'로 여기는 것은, 지역 민생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한 것이다. 지금 호남은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에 대한 올바른 평가,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입각한 공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잘사는 호남'을 갈망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 그것이 정치권이 가져야 할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다.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에ditor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